

도, 공정한 공직문화 조성 청렴정책 가동

김지사 주재 청렴정책조정회의 개최... 추진 계획 공유 등 제1호 청렴주의보 발령·내달 말까지 집중 신고기간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가 공직사회 청렴도를 1등급으로 높이기 위한 세부과제 추진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3월 17일 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 주재 '2025년 제1차 청렴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공직사회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2025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계획'을 공유, 실구 간 협업을 강화해 실효성 있는 청렴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공직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청렴이며, 도민이 신뢰하는 공직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전 직원이 청렴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공직자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고 강조했다.

또한, "모든 정책과 행정 성과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할 때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다"며,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2025년 청렴정책 추진 방향으로 △반부패·청렴 인프라 조성 △부패통제 실효성 확보 △소통과 참여를 통한 청렴문화 확산 등 3대 추진전략과 45개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최근 3년간 3등급을 유지해온 종합청렴도를 1등급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주요 과제에는 고위공직자의 술선 수범을 통한 청렴정책 추진 강화와 특권·구태 관행 철폐, MZ세대 공무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청렴문화 정착 등이 포함됐다.

특히, 조직 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청렴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젊은 공무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간부 모시는 날' 등 기존 관행을 개선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 감사위원회는 2025년 청렴정책을 본격 실행하는 동시에 '제1호 청렴주의보'를 발령하고, 다



17일 전북특별자치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제1차 청렴정책 조정회의에 김관영 도지사가 "전 직원이 청렴을 최우선의 가치로 노력해 공직자로서 자부심과 성취감을 가지는 한 해를 만들자"고 당부하고 있다.

음 달 말까지 '간부 모시는 날'과 '직무상 감질' 등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해 강력한 반부패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북자치도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도민과 함께하는 청렴 정책도 추진한다.

'찾아가는 청렴 소통 간담회'를 확대 운영하고, '도민감사관 청렴소통 추진단'을 활성화해 청렴 문화 확산

에 앞장선다. 또한, 공공재정 부정부수급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업무추진비 및 지방보조금 집행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점검체계를 구축 계획이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4~5월 중 '청렴서약식'과 '제2차 청렴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7월에는 '제3차 청렴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연중 청렴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도-전북대, 생성형 AI 시스템 구축 '맞손'

시를 통한 행정 효율성 제고·비용 절감 추진

전북특별자치도가 행정 효율성 향상을 위해 전북대학교와 손잡고 오픈소스 기반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시스템을 자체 구축한다.

전북자치도는 17일 전북대학교 진수당에서 전북대 SW중심대학사업단과 '오픈소스 기반 생성형 AI 시스템 자체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생성형 AI 기술을 행정 분야에 도입해 도청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ChatGPT를 전 직원에게 보급할 경우 연간 17억 원 이상의 구독비용이 소요되고 자료 유출 위험도 있어, 서버 구입비 3억 원으로 자체 AI 시스템을 구축하여 구독비 절감과 함께 보안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북자치도는 생성형 AI 시스템을 통해 문서작성, 정책개발, 데이터 관리 및 법률검토 등 다양한 행정 업무



를 지원할 계획이다. 목표성능은 최신 ChatGPT와 가까운 수준이며, 웹 검색과 PDF 문서 읽기, 음성변환 요약, 파일튜닝, 딥 리서치와 유사한 기능을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전북대학교는 그간 운영해 온 캡스톤디자인 프로그램에 이번 실무 과제를 접목한다. 특히, 오픈소스 모델 운영 및 튜닝 경험, 경진대회 수상, 논문 발표 경험 등이 있는 우수 AI 전공 학생들을 중심으로 연구팀을 꾸려, 전북도와 협업을 통해 모델 간 성능 비교와 추론엔진 연구,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발 등 현장 중심의 과제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후에도 '심각' 단계 유지

전북특별자치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위험도가 감소함에 따라 지난해 10월 1일부터 시행한 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지난 14일부로 종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철새의 북상 이동이 지속되고, 3월 들어 전남과 충남에서 2건의 AI가 발생하는 등 여전히 위험 요소가 남아 있어 전국 7개 위험 시도(경기,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북, 세종)는 '심각' 단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12월 5일 김제

공덕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67일간 총 11건이 발생하여 179만 수의 가금류를 살처분하였다.

전북은 전국에서 닭·오리 가금류 사육 규모가 가장 큰 지역(전국 1위, 18%)으로, 특히 김제·부안 지역은 주요 철새도래지가 인접해 있어 야생 조류에 의한 바이러스 오염 위험이 높은 지역이다.

그러나 방역 대책 강화로 농장 발생 건수(18건→11건, 7건 감소)와 살처분

규모(239만수→179만수, 60만수 감소)를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

이 같은 성과는 오리농가 동절기 사육제한, 종오리농장 방역전담관 운영, 거점소독시설 운영 확대,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소독 차량을 총동원한 농장 주변 및 주요 도로 집중소독과 같은 방역 활동의 성과로 분석된다.

특히, 지난 2월 7일 군산 토종닭 농장에서 AI가 발생했을 당시 전통시장 내 살아있는 닭·오리 유통을 5일간 전면 금지하고, 관련 시설에 대한 일제 검사를 실시해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했다.

전북자치도는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종료됐지만, 철새의 북상 이동이 계속되는 점을 감안해 전국 방역지역 해제 시까지 '심각' 단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재난대책본부·상황실 지속 운영 △예찰·검사 강화(심각단계 검사주기 유지) △육계·육용오리 출하 후 14일 이상 입식제한 적용 △발생시군 인식 전 2단계(도·시군-검역본부) 점검 △철새도래지 집중소독 연장(~3.31일) △거점소독 시설 24시간 운영, 20만수 이상 산란계 통제조소 운영 등이 유지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 실무협의회 개최

전북·광주·전남 3개 시·도 모여... 호남권 발전 협력 논의

전북자치도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는 지난 14일 오후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에서 상호 협력을 통한 호남 지역 경제를 활성화 및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 실무협의회'는 2024년 7월 4일 전북·광주·전남이 합의한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 공동선언과 우선 추진사업에 대한 실행방안을 논의하고 추진하기 위해 3개 시·도 기획조정실장은 단장으로 구성·운영되는 조직체다.

이번 실무협의회는 지난해 9월 20일 개최 이후 두 번째로 열리는 자리로, 전영령 전북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이병철 광주시 기획조정실장, 장현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해 산업·경제, 건설·SOC, 문화·관광, 교류·협력 분과별 각 시·도 담당부서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3개 시·도는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는 타 시·도의 행정통합 동향 등을 공유하고,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 공동선언 사항을 효율적으로 전달 및 이행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 구성 및 주요 과업, 예산 부담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또, 2024년 9월 1차 실무협의회를 통해 발결된 분과별 과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신규 제안 과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만호 기자

군산시·고창군, 고령자 주거 인프라 연계 돌봄서비스 시범사업 공모 선정

국비 1억4800만원 확보... 주거 공용 공간 활용한 맞춤형 노인 돌봄 서비스 제공 예정

전북특별자치도가 보건복지부 주관 '주거 인프라 연계 돌봄서비스 시범사업' 공모에서 전국 4개 선정 지역 중 군산시와 고창군이 포함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국비 1억4,800만원을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고령층이 집중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어르신들이 살던 곳

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단지 내 공용 공간을 활용해 돌봄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북자치도에서 선정된 군산시와 고창군은 고령자 복지주택 거주 취약 노인을 대상으로 지역 내 노인 돌봄기관과 협력해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지원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내 지속 가능한 돌봄체계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황철호 전북자치도 복지여성보전국장은 "이번 사업 선정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초고령화 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한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라

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촘촘한 돌봄 서비스를 마련해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향후 국비 지원을 활용해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주민 의견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주거·돌봄 연계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만호 기자

도 특사경, 봄철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

내달 4일까지 실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수산물 원산지 위반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7일부터 4월 4일까지 3주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불철 소비 증가 수산물을 취급하는 대형마트, 수산물 유통·판매업체, 음식점 등 60여 개소를 대

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사항 지도 및 교육과 함께 병행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사항은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 △표시 방법 위반 △거래내역 비치·보관 여부 △수입 수산물의 국내산 둔갑 및 혼합 판매 등이며,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적발 시 원산지 미표시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만호 기자

- 광고 -

밀양박씨 이정공파 종중 총회

밀양박씨 이정공파 종중 총회를 알리고자 합니다.

#일시 : 2025년 3월 22일 오전 11시

#장소 : 티하우스레몬(서울 강남터미널 2층) / 중식(시래마을)

- 안건 -

- 결산 보고 ● 감사 보고
- 부동산매도건 ● 종중규약변경건
- 기타 안건

밀양박씨 이정공파 종중 회장 박철진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